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1. 서론

소통은 단순히 정보와 메시지가 전달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은 귀를 기울여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도 아니다. 소통은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르거나 상반되어 보이는 이해관계를 일반화된 이익으로 조정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야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언론이 서 있다. 사회적으로 분화된 하위 시스템의 하나인 언론의 기본 기능이 사회적 소통이기 때문이다.

“각 신문들의 개별적 특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내용이 획일적이었다는 점이다. 기사를 보는 각도가 거의 같았고 편집 방향이나 태도도 비슷했으며 심지어는 표현 기법까지도 쌍둥이처럼 닮았다”(박영상, 1986). ‘신문과 방송’이 1986년 한 해 한국 언론을 돌아보는 특집에서 박영상은 한국 신문의 획일성을 이렇게 질타했다.

이제 신문에서 획일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한국 언론과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언론의 정파성이 그것이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2009년 ‘벽을 허물자’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그 일환으로 3회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계의 갈등과 반목이 한국 언론과 저널리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¹⁾ 언론사 간에 커다란 벽이 있고,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가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정파성’이 한국 언론의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되며(이재경, 2004; 강명구, 2005; 남재일, 2008 등), 이로 인한 공정성 위기가 한국 신문이 위기를 맞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이준웅·최영재, 2005).

한국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파성 자체가 아니라, 정파성의 정도 혹은 정파성의 구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파성의 결과로 나타난 한국 언론의 현실이 사회적 소통과 논의의 기본이 되는 사실과 사실관계의 공유를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와 비판이 그것이다. 이재경은 언론사가 정파적 입장을 견지하며 보도대상 사실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편집관행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저널리즘이 위기에 봉착한 중요한 원인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실에 대한 논리적 토론”이 성

1) 세미나 발제문과 토론 내용은 관훈저널 2009년 여름, 가을 및 겨울 호에 게재되어 있다.

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재경, 2004).

이 글은 한국 언론에서 정파성이 어느 정도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며, 그와 같은 정파성이 형성되게 된 과정과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언론이 정파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다루고 있지만, 주로 전국일간신문,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같이 보수로 분류되는 신문과 한겨레, 경향신문, 혹은 시기별로는 서울신문(대한매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방송도 정파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서 드러나는 정파성은 방송의 공정성 혹은 균형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대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신문에서의 정파성도 간과하기 힘들 정도로, 일부 인터넷신문은 다른 어떤 뉴스 미디어보다 강하고 노골적 정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신문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들은 결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이 글이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뉴스 미디어 중 역사가 깊은 신문에 집중하는 것이 논의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 언론에서 정파성이 가장 첨예하고 대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뉴스 미디어가 바로 앞서 언급한 신문들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언론의 정치적 지향성, 정파성, 이념적 지형 등과 관련되는 연구들도 대부분 이들 신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신문들만으로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본다. 정치적 지향에서 보수로 분류되는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이 신문 독자 시장에서 가구구독자를 기준으로 약 70%를 점하고 있고, 진보로 분류되는 한겨레와 경향은 가구구독자 기준으로 합쳐서 10% 미만이지만, 보수와 진보의 의견 구도에서 중요한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까지 신문이 각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수치와는 별개로 정치적·정책적 의사결정자들과 전체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에서 아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정파성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이 정파적 경향을 보이는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당한 정파성과 그렇지 못한 정파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파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정파성과 관련되는 인접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도덕적 판단에서 기대되는 불편부당성, 한국에서 방송에 요구되는 균형성, 모든 커뮤니케이션, 특히 언론과 같은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규범인 진실성, 진실 추구를 위한 방법인 객관성 등이 그러한 개념들이다.

다음으로 나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언론사의 정파적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주제들, 정파성과 진실성과의 관계, 그리고 정파성을 드러내거나 감추는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정당 혹은 정부와의 관계가 정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았다. 이어서 독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독자들이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나는 먼저 민주주의와 언론이 발달한 나라인 미국과 독일에서 신문의 정파성이 나타난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한국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어서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당파성이 강하게 나타난 원인을 사회의 권력구조 변화, 갈등 조정 방식, 신문 산업의 특징 등으로 구분해서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사회적 소통과 언론의 정파성의 관계를 하버마스의 실천적 담론 개념을 이용해 논의한 다음,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 규범적 개념들: 불편부당성, 균형성, 진실성, 객관성 그리고 정파성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저널리즘은 사회 전체 시스템에서 분화된 하위 시스템의 하나다. 하위 시스템인 저널리즘의 기능은 사회의 자기 관찰이다(Luhmann, 1996, p. 173).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사회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

개별 행위자의 시각에서 보면, 저널리즘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선택과 결정을 위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또한 자기 스스로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근대화 이후 사회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곳에서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언덕 너머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대한 정보를 대신 제공해 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재구성할 수 있다.

나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기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다른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될 것을 기대한다(Haller, 2004). 그러나 이해관계나 다른 동기로부터 자유로운 ‘관찰자’에 대한 기대는 현실에서 충족되기 힘들다.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실의 연속과 관계망의 일부를 선택해서 현실을 ‘구성’한다. 우리가 소통에 사용하는 도구인 언어 역시 불완전하며 불안정하다. 또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저널리즘은 또한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미디어 관행, 미디어 조직, 미디어 외부의 요소들,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Schoemaker & Reese, 1996/1997).

아래에서 살펴볼 개념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 인식과 저널리즘 활동의 불완전성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을 통한 사회적 소통을 가능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기되는 규범들이다.

1)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정파성과 대칭에 서 있는 개념이 불편부당성이다. 한국의 대표적 신문의 하나인 조선일보는 사시로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과 함께 ‘불편부당’을 채택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역시 윤리규정²⁾에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가장 기본적인 목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주장한 원칙과 그 사람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그렇다면 불편부당을 내세우는 조선일보나 뉴욕타임스를 정파적이라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불편부당은 어느 편이나 당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impartiality이다. 불편부당성은 도덕적 판단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다. 그러나 트로이 졸리모어는 철학에서 흔히 ‘불편부당성’을 ‘도덕적(으로 옳은) 불편부당성’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Jollimore 2011). 우리가 ‘불편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도덕성과는 무관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졸리모어는 연쇄살인범이 유명인과 닮은 사람을 골라 살인을 했다면, 그는 희생자의 직업, 종교 등에 대해 ‘불편부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도덕적인 불편부당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예를 들었다.

어떤 행위나 행위자의 불편부당성은 그 행위나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며, 누구에게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³⁾ 따라서 불편부당성의 여부는 많은 조건이 붙는 것으로 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불편부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졸리모어는 크게 형식적인 의미의 광범위한 불편부당성과 특수한 형태인 도덕적 의미의 불편부당성으로 구분했다. 저널리즘의 원칙으로 불편부당성을 채택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의미의 불편부당성을 말한다. 도덕적 판단에서 우리가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편향(bias)과 편견(prejudice)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이 요구되며, 사안에 개입된 사람들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treated as equal) 동등한 취급(equal treatment)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Dworkin, 1977, p. 227, Jollimore, 2010 재인용).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이 응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Jollimore, 2010).⁴⁾

2) ‘Ethical Journalism. A Handbook of Values and Practices for the News and Editorial Departments’, September 2004 (http://www.nytco.com/pdf/NYT_Ethical_Journalism_0904.pdf)

3) “A is impartial in respect R with regard to group G if and only if A's actions in respect R are not influenced at all by which member(s) of G benefit or are harmed by these actions.” (Gert 1995, 104, Jollimore, 2011 재인용).

4) 더 나아가 도덕적 결정에서 때로는 정파성(parti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가족이나 공동체, 국가에 대한 충성이 그 예이다. 우리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남다르게 보살필 것을 기대한다. 불편부당을 내세워, 자기 자식을 수백만

이처럼 우리가 언론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도덕적 의미의 불편부당성은 형식적인 의미의 무차별적이며 중립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차별된 그리고 보는 시각에서는 한 쪽으로 기운 판단과 행동을 포함한다. 단지 그러한 차별이 사적 이익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정파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부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균형성

균형성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 이해관계를 치우침이 없이 고르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⁵⁾ 균형성(balance)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과 인접한 개념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난다. 균형성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기준이라면 불편부당성은 태도의 측면이다.

한국의 방송법은 제6조제9항에서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신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경향보호를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균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관한 규정들은 한국 방송법의 규정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균형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령 공영 ARD 회원사인 WDR의 법적 근거인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WDR 법’의 제5조(프로그램 기본 원칙) 제4항은 아래와 같이 WDR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1. 전체 프로그램에서⁶⁾ 의견의 다양성과 세계관, 정치적, 학문적, 예술적 방향의 다양성이 최대한 광범위하고 빠짐없이 반영된다. 2. 방송 지역의 중요한 사회적 세력들의 발언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3. 전체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한 정당, 한 집단, 한 이익집단, 한 종교 혹은 한 세계관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WDR은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해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평가하고 분석하는 개별 방송은 저널리즘적인 공정성(Fairness)에 상응해야 한다. 보도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제공이다.” 독일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 프로그램이 편향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편향성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 전체 프로그램이 균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 아이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우리의 직관은 그것이 도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졸리모어에 따르면, 도덕에서 정파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편부당 이론이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 정파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넓은 차원에서 보면 불편부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불편부당 이론이 있다. 이와 함께, 불편부당은 도덕의 한 형태이며, 어떤 경우에는 불편부당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정파성 이론이 있다 (Jollimore, 2011).

5) 균형성에 대해서는 김영욱, 2007 참조.

6) 여기서 전체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의 전체가 아니라, 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말한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요구되는 균형성은 모든 언론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니다. 이 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기대되거나 선택되는 가치이다. 사람들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전달자보다는 균형적인 정보와 해설을 제공하는 전달자를 더 신뢰 혹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추측된다. 이 경우 언론사가 보다 넓은 수용자 층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성을 하나의 편집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당 신문을 비롯한 사회적 집단과 연계된 신문들이 발달했던 북유럽의 ‘민주주의적 조합주의 모델’ 국가들에서 정당 신문이 점차 퇴조하고, 특히 지역지에서 정치적 균형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Hallin & Mancini, 2004/2009).

이처럼 균형성은 언론인이나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성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집단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적정한 수준으로 언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 혹은 기대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적절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균형성은 모든 언론에게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 언론사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설득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이다. 스스로 균형적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균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3) 진실성/진실 추구

진실성(truthfulness)은 불편부당성이나 균형성에 비하면 언론에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규범이다. 불편부당에 대한 요구는 더 넓은 의미의 ‘정의’나 ‘공정성’ 등으로 피해 갈 수 있고, 균형성에 대한 요구는 ‘세계관의 실현’ ‘언론 자유’ 등으로 회피할 수 있지만, 진실성에 대한 요구는 저널리즘이 피해갈 수 없는 규범이다. 진실성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⁷⁾ ‘기본 조건’이라는 것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결과적으로 진실이라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일단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진실(truth)과 진실성(truthfulness)은 다른 개념이다. 진실은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진실성은 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다. 진실은 생각한 것(혹은 확신한 것)과 존재하는 현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유한한 인식 능력을 가진 내가 보장하기 힘들다. 진실성은 내가 생각한 것(확신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내가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진다(Hartmann, 1962, p. 420 이하).

그렇다고 해서 진실성이 진실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진실성은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하기 때문이다. 진실성은 상대가 진실을 알게 되길 원하는 태도다(Hartmann 1962, p. 462).

7) 언론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김영욱, 2006 참조.

진실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진실성은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호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트마 미트(Dietmar Mieth)는 진실성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규범이라고 보았다(Mieth, 1997, p. 88이하). 우리가 흔히 언론의 기본 규범으로 알고 있는 진실 추구 혹은 진실성은 언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규범이며, 언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진실성이란 무엇인가? 미트가 제시한 진실성 의무에 대한 죄(sins)를 통해 우리는 진실성에 접근할 수 있다. 그는 진실성 의무에 대한 죄의 예로 기만(falsification), 은폐(concealment), 확인, 강요, 과장 등을 들었다(Mieth, 1997, p. 100). 즉, 사실과 다른 주장만이 아니라 반쪽의 진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것, 실제와 다른 인상을 주는 과장 등은 모두 진실성의 의무에 대한 죄가 된다.

진실성이 단지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통해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미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사실을 전해야 한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진실의 덕목은 진정성과 정확성이다. 즉, 자기가 아는 것을 “꾸밈 없이 직접적이며 적절하게 표현하는” 진정성(sincerity)과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진실성에 포함된다(Williams 2002, p. 44).

4) 객관성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Max Weber)과 마찬가지로 인간 인식의 한계와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도입되었다.⁸⁾ 이 개념의 발생론적 추적을 통해 우리는 객관성 개념의 정확성과 함께 사실관계의 주장에 대한 신중성, 사실을 알게 된 출처와 경로를 밝히는 투명성, 사실과 사실관계의 제시에서 가치판단배제 등의 내용을 내포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편견이나 편향성, 게으름이나 편의성을 극복하고 사실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태도와 노력을 말한다. 정파적 언론도 객관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개념은 기계적 균형성, 양비양시론, 인용을 통한 책임 회피 등을 통해 오염되었다. 이러한 오염된 형태의 객관성을 이 글에서는 객관주의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5) 정파성

정파성은 이 글에서 가치, 경험, 지식,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형

8)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영욱, 2002 참조.

성된 사회구조(권력구조, 경제적 분배구조 등)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사안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이념적 정파성도 ‘이념’을 사회 기본 질서와 구조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입장과 태도라고 보면, 이러한 의미의 정파성에 속한다. 정파성은 불편부당한 태도를 취하는 저널리즘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정파성은 진실성에 반하는 범죄를 행하지 않은 한 도덕적으로 비판하기 힘든 태도 혹은 결과이다. 우리는 공영방송과 같이 공적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에게는 정파성을 버리고 균형성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인 신문사나 다른 언론사들에게 정파성을 요구하기는 힘들다.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층고는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파성이 전체 사회의 소통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개별 언론사가 정파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언론의 시각에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다른 글에서 언론의 정파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정파성’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으로 구분해서 그 차이를 제시한 바 있다(김영욱, 2009, 4쪽 이하).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언론사가 가진 정파적 경향성은 어떤 사안(events 및 현상)을 어떤 비중으로 보도할 것인가(뉴스 가치)와 그 사안에 포함된 많은 사실과 사실관계 중 어떤 사실(facts)과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고려는 정당한 정파성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사안의 발생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필요한 사실 및 사실관계를 조합해서 보도하는 경우, 일반상식적인 판단(혹은 사회통념적인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실과 사실관계(때와 장소 및 행위주체, 직접적인 선행사건, 상반되는 입장, 상반되는 주장,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사실관계 등)가 정파적 경향성 때문에 기사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상대가 사건의 실체를 알기 원하는 진실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정파적 효과는 정당한 정파성의 범위를 넘게 된다.
- ▲ 사안에 포함된 사실을 보도에서 정파적 경향성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제시(거짓)하거나 사실관계(인과관계 등)를 일반상식적 판단과 다르게 제시(왜곡)하거나 혹은 충분한 근거나 확인 없이 제시(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시는 커뮤니케이션 윤리의 핵심인 진실 추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 ▲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에 대해 상반된 견해들이 각각 일반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파적 경향성 때문에 이 중 한 견해 혹은 일부 견해만을 적용해서 서술(은폐)해서는 안 된다. 왜곡과 단정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읽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을 의도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미필적 고의’)도 마찬가지다. 진실 추구는 상대가 진실을 알기 원하는 태도를 말하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커뮤니케

이션 윤리의 핵심인 진실 추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정파성은 정당하지 못하다.

▲ 사안에 대한 평가(evaluation)에서 정파적 경향성으로 인해 가치나 선호(preference)를 적용해서 서술하는 것이 허용되며, 복합적인 사안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언어적으로 그것이 필자의 가치나 선호, 추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역시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못하다.

3.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독자의 인식

1) 정파성의 사례들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한국 언론이 위에서 제시한 의미에서 정파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희 등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김경희·노기영, 2011, 363쪽)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는 신문사의 이념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신문사를 보수와 진보지로 구분하고 특정 연구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방법론적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보수와 진보지의 지형이 분명한 현실을 그러한 연구들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보수로 분류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진보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의 하루 혹은 이삼일 치를 펼쳐놓고 비교해 보면 체계적인 분석 없이도 두 ‘진영’이 사회의 논쟁적 사안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정도다.⁹⁾

실제 김경희 등이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이념적 지향을 분석한 결과,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김경희·노기영, 2011).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의 사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을 ‘진보당에 대한 입장’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각각의 주제들에서 조선과 동아, 경향과 한겨레가 뚜렷하게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었다. 경제이념을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과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해서 측정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에서 사설과 칼럼을 제외한 북한 관련 보도 기사의 분석(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에서도 이념적 차이가 보도의 차이(기사 관점, 북한의 이미지, 취재원의 속성 등)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미디어오늘의 2011. 2. 18일자 기사 “이명박 정부 겨냥한 ‘조선일보 칼날’ 왜? [뉴스분석] 법무장관 ‘수사 개입’ 보도의 이면…정부압박과 ‘종편 특혜’ 논란”이 그 한 사례이다.

언론사의 정파적 경향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북한 및 남북문제에 관한 보도이다(윤영철, 2000; 김재홍, 2003; 이원섭, 2006 등). 국가보안법에 관한 보도 역시 넓게는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송용희, 2007). 그러나 한국 언론의 정파적 태도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념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관련된 논쟁적 이슈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종합부동산세와 호주제 폐지(최현주, 2010), 대통령 친인척 비리(고영신, 2007), 경제위기설(김성해 · 김춘식 · 김화년, 2010), 미국산 쇠고기 수입(김인영, 2010), 정부/대통령에 대한 평가(김영욱 · 임유진, 2009) 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정치, 외교, 경제, 사법, 교육, 노동, 세무, 복지 등 광범위한 정책적 영역에서 정파적 보도 태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국의 독자와 시청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물론 모든 논쟁적인 사안에서 일관되게 특정한 보도 태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북 지원과 북한 핵’ ‘종합부동산세 폐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분석한 최현주는 주제 영역에 따라 미세한 변동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최현주, 2010). 스트레이트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치이념 차원인 ‘대북지원’에서는 동아, 중앙, 조선이 보수, 한국과 경향이 중도, 한겨레가 진보로 나타났다. 경제 차원인 ‘종부세 폐지’에서는 동아, 중앙, 조선이 보수, 한국이 중도, 경향과 한겨레가 진보로 나타났다. 사회 · 문화적 차원인 ‘호주제 폐지’에서는 조선이 중도로, 나머지 분석된 신문들은 모두 진보로 나타났다. 박재영이 2009년 7월 1일 개정된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의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사 대상으로 정파성 지수를 측정한 결과(박재영, 2009)에서도 일부 그런 경향이 발견되었다. 취재원 활용의 불균형성으로 측정한 ‘정파성 지수’에서 조선일보가 여론조성기(1월 ~6월)에는 한겨레와 경향과 함께 반대하는 쪽으로 편향되었지만, 법 시행 이후 효력이 발생한 시기(7월~8월)에는 찬성 쪽으로 편향성을 보였다. 경향신문 역시 효력 발생기에는 찬성 쪽 편향성을 보였고, 한겨레는 두 시기 모두 일관된 반대 편향을 보였다.

주제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는 사회적 갈등의 복합화에 따라 이념적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주제 자체가 그러한 이념적 경향성을 평가하기 부적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2)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신문의 정파적 태도가 사실과 사실관계의 보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발생한 사실을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나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해설 기사에 정파적 경향이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도하는 사안에 대한 실체를 잘못 파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최현주의 연구에서 해당 신문의 논조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의 경향성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시되는 관점

과 취재원의 선택에서도 상당한 불균형이 확인되었다(최현주, 2010). 최현주는 결론에서 “이 는 똑같은 현실에 대해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제시하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커서 현실에 대 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기존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보았다.

더구나 기사 제시나 서술의 방식에서 ‘객관화 전략’(송용희, 2007)을 사용해 정파성을 감 추고 있다. 2004년 이슈가 되었던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에 대해 서로 다른 논조를 가진 조선 일보와 한겨례의 해설 기사를 분석한 송용희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송용희, 2007). 해 설 기사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 피동형(‘지적이다’ ‘풀이된다’ ‘분석이다’ 등)이 전체 문장에서 조선일보에서는 14.3%(전체 453개), 한겨례에서는 4.9%(전체 692개)를 차지했다. 송용희는 이 비율은 낮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기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객관화한 사례로 보았다. 인용 또한 두 신문에서 각각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객관화의 전략이라고 송용희는 보았다. 피인용자도 두 신문에는 크게 차이가 났고, 동일인인 경우에도 인용의 맥락이 달라 한 정치인의 입장이 두 신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두 신문은 또한 자사의 논조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인용하면서 이들이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흥미 있는 것은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채택한 열린우리당과 (그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대결시켰고, 한겨례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단체 및 보수언론을 전문가와 대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송용희, 2007, 246쪽 이하).

만약 두 신문의 독자들이 신문 기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조선일보 독자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한겨례 독자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보수 일부 세력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언론은 프레임, 제목, 취재원, 확인된 사실과 그렇지 못한 주장의 혼용, 사실과 가치적 판단의 혼용 등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들의 정파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인지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특정 사안을 보도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김수정 등은 2009년에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박원순 변호사의 주장과 그에 따른 과정,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주장과 그에 따른 과정에 대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경향신문의 보도를 분석했다(김수정 · 정연구, 2011). 결과에 따르면 한겨례와 경향신문은 두 사건 모두에서 사건 전개과정의 주요 시기마다 보도를 한 반면,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세 신문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한 건씩 보도를 했고, 민간인 사찰 주장에 대해서는 세 신문이 모두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두 연구자는 이 사례가 ‘매체의 정파성에 의한 의도적 배제’라고 지적했다.

3) 정당 정파성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정파성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정당 정파성이라는 점이다. 윤영철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과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서해교전에 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대한매일), 한겨례의 보도와 사설을 비교했다(윤영철, 2000). 신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정당-신문간의 병행관계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철, 2000).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례의 보도를 비교한 고영신의 연구에서 정부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보도 양, 보도 태도, 프레임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다(고영신, 2007). 여기서도 신문-정당 병행관계가 확인된 것이다(고영신 2007, 191쪽).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례, 경향신문 기사에 나타난 담론을 분석한 김영욱 등의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 신문의 정당 정파적 특성이 드러났다(김영욱·임유진, 2009).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 발생한 의료분업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한 보도를 분석한 양정혜의 분석 결과(양정혜, 2001)에서도, 조선일보와 한겨례가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각각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정부의 이미지와 관련된 프레임 분석에서 조선일보(41건)는 무능한 정부 45%, 노력하는 정부 24%, 원인 제공자 24%, 질서유지 7%로 정부에 부정적인 반면, 한겨례(42건)는 무능한 정부 32%, 노력하는 정부 59%, 원인 제공자 0%, 질서유지 10%로 정부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했다(양정혜, 2001, 300쪽). 의약분업 분쟁이 이념적 혹은 정치적 성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관계에 따른 다른 프레임을 사용해 정부의 이미지를 부정 혹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신문에서 정당 정파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한국 언론의 정당 정파성은 독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은 2009년 독자들이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전국일간지 독자 500명(서울시 거주)을 대상으로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김영욱, 2009).¹¹⁾ 아래에는 간략하게 세부 결과의 일부를 소개한다.

독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해서 물은 결과, 보수를 ‘1’로 진보를 ‘5’로 계산한 5점 척도에서 평균값은 3.01로 거의 중간인 3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

10) 이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의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체제를 옹호하는 갈등 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1) 이 조사를 위한 설문 경희대 이종혁 교수와 함께 설계했다.

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열독 신문별로 구분하면, 독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평균을 보면 조선일보 독자가 2.77로 보수 쪽으로, 동아일보 독자가 2.98으로 약간 보수, 중앙일보 독자가 2.97로 거의 중간에 가깝지만 약간 보수, 경향신문 독자가 약간 진보로 기운 3.06, 그리고 한겨레 독자가 3.37로 진보 쪽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평균(3.01)과 비교하면 조선일보 열독자는 0.24만큼 보수 쪽으로, 한겨레 열독자는 0.36만큼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대체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한 신문을 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에 비해 자신이 열독하는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가 보수-진보 방향성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경향성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체 신문에 대한 평가 평균은 2.94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 평균(3.01)에 비해 약간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신문별로는 조선이 2.59, 중앙이 2.65, 동아가 2.66으로 보수 쪽으로 기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경향이 3.10, 한겨레가 3.56으로 진보 쪽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열독자 자신의 평가와 비교하면 보수 쪽으로 평가되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는 신문이 열독자보다 더 보수 쪽으로 기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진보 쪽으로 평가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신문이 열독자보다 진보 쪽으로 더 기운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조선, 중앙 및 한겨레에서는 샘플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향과 열독 신문의 성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문이 독자들보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더 ‘오버’하고 있다고 독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조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용산 재개발 철거민 점거농성과 경찰의 진압’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뉴스전문 채널 진출 허용’ ‘시국선언 확산’을 선택했다. 모두가 정부/여당 및 야당이 날카롭게 대립한 이슈들이다. 열독 여부와 상관없이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찬성 혹은 반대)으로 보도했다고 보는가를 물어본 결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매우 드물었다. 독자들이 나름대로 개별 언론사가 특정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추측 혹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응답자 자신들의 찬반 의견 평균을 중심으로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책의 경우는 모두 동일하게 경향신문이 약간 반대하는 방향으로, 한겨레가 상당한 정도로 반대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반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모든 사안에서 상당한 정도로 찬성하는 방향으로 보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일보는 중간 정도였다. 방송에서는 MBC가 제법 반대하는 방향으로, KBS가 약간 찬성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며, SBS는 그 중간 정도였다.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같이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응답자들의 이러한 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그 일관성이다. 응답자의 눈에 신문과 방송이 이처럼 정치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언론이 보도에서 특정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혹은 언론 보도가 특정 방향이라고 독자들

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보도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정부와 여당 혹은 야당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응답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 신문들은 높은 수준으로 정당 정치화되어 있었다.

4. 언론의 정파성의 원인

1) 신문 정파성의 역사: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

한국 신문이 왜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정당 정파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일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이 발달한 미국과 독일에서 신문의 정파성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례가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 역사의 초기부터 불편부당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초기 독일 신문학자인 토비아스 포이세르(Tobias Peucer)는 이미 1690년에 “기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에는 신뢰성과 진실추구가 포함된다. 자신의 편을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을 섞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Haller, 2004, p. 24에서 재인용). 또 다른 초기 신문학자인 카스파 폰 슈틸러(Kaspar von Stieler)가 1695년에 쓴 ‘신문의 재미와 유용성’이라는 글에서는 신문은 순수한 소식만을 전해야 하며, 의견이나 비평을 실어서는 안 되며, ‘정파적’인 신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Behme, 2004, p. 34).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부당성을 주장하는 보도가 일반적인 규범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다.

マイ클 셔슨(Michael Schudson)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상업화와 이에 병행해서 진행된 저널리즘의 전문직화(profesonalization) 과정을 통해 신문이 정파성에서 벗어났다(Schudson 2003, p. 71 이하). 18세기 중반까지 미국 신문은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된 18세기 후반에 신문이 매우 정파적이 되었고, 정당의 ‘무기’로 창간되는 경우가 많았다(Schudson, 2003, p. 71). 이 시기에 기자직은 아직 전문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1833년 New York Sun을 시작으로 대중지가 생겨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했지만, 19세기 후반까지 신문이 정당 및 정치인의 재정 지원을 받는 등 이들과의 연계가 계속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신문 경영에서 광고가 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신문이 재정적 호황을 누리면서 신문들이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천명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기자들의 위상, 수

입, 기자직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는 기자들이 전문직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협회가 결성되기 시작한다. 1922~1923년 결성된 미국편집인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는 출범 대회에서 기자윤리강령(Canons of Journalism)을 채택하는데, 이 강령에 진지성(Sincerity), 진실성(Truthfullness), 정확성(Accuracy)과 함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 포함된다. 셋은 이러한 원칙이 뉴스 수집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Schudson, 2003, p. 82). 객관성 규칙이 에디터들에게 기자 관리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팽배한 과학주의, 정파성을 19세기의 유물로 보는 엘리트들의 시각 등이 영향을 미쳐, 당시 부상하던 직업군인 기자직에게 객관성이 보다 진보된 이념으로 비쳐졌다는 것이 셋의 견해다. 당시 PR이 극성을 부린 것도 미국 신문의 성찰에 도움이 되었다. 셋은 다른 글에서, 미국에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도입된 것이 인간 인식의 한계와 사실의 주관성에 대한 성찰이 그 한 배경이라고 보았다(Schudson, 1978, p. 121 이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객관성이 미국 저널리즘의 윤리적 규범이 되었다. 셋에 따르면 미국 저널리즘의 특성은 뉴스 전문직의 독자성 위에 형성된 상업적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Schudson, 2003, p. 86).

셋은 유럽의 경우는 저널리즘의 전문직화와 객관성에 대한 태도가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Schudson, 2003, p. 84 이하) 독일의 사례를 보면, 흥미 있는 공통점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언론이 정당 정파성을 벗어난 것은 미국보다 늦은 2차대전 이후이다(Behme, 2004).¹²⁾ 베메에 따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초기 신문도 정파적일 수가 없었다. 검열 때문이다. 18세기에도 신문들이 독자적인 편집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온 소식들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불편부당성이 신문에 요구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신문들은 제목에 ‘불편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¹³⁾ 그러나 당시 신문들은 통치권력의 강력한 검열로 인해 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기 힘들었고 기껏해야 통치권력의 도구로 기능했다. 검열과 압박의 강도는 시기별로 들쭉날쭉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은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라인란트를 점령했던 나폴레옹의 군대가 물러간 다음 나폴레옹에 반하는 견해와 함께 초기 민주주의적 입장을 보였던 ‘라이니셰 메쿠어’(Rheinische Merkur)가 1816년에는 폐간되기도 했다.

독일에서 정파적 신문의 본격적인 역사는 1848년 ‘3월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Behme, 2004, p. 39). ‘3월혁명’으로 획득한 언론자유로 인해 독일에는 신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신문들이 정파적 신문들이다. 이 시기에 신문은 특정 정당의 편을 들거나 정당지이거나 혹은 정치적 조직의 출발점으로 기능했다. 정당과 신문의 관계에 대한 반성

12) 아래 독일 신문의 정파성 역사는 Behme, 2004 참고.

13) 대표적인 예가 ‘함부르크의 불편부당한 통신원들의 국가 및 지식인 신문’(Staats- und Gelehrte Zeitung des Hamburgischen unpartheyischen Correspondenten)이다. Behme는 이 신문이 18세기 독일 신문의 사례로 제시했지만(Behme, 2004, p. 35), 구글이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에는 이 신문의 제1호가 1819년 1월 1일 발간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없지는 않았다. 1898년 창간된 베를리너 몰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는 사설에서 ‘정파적이지만 정당은 아니다’는 것이 그 신문의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격한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것은 어리석거나, 게으르거나, 비겁한 일이다’고 쓰고 있다. 이처럼 신문의 정파성 자체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Behme, 2004, p. 41). 독일에서도 19세기 말 미국의 폐니 프레스를 모델로 대중지가 나타나지만 정파를 뛰어 넘지는 못했다.

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독일 신문은 강력한 겸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베메에 따르면 이 시기 독일 신문들은 통치권력 편에 서서 감시체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신문의 신뢰는 추락했다(Behmen, 2004, p. 45). 1918년 1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도 신문은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신문들은 정치적인 대결에 매진했다. 1933년 나찌의 집권과 함께 모든 언론은 획일화된다.

서독에서 미국과 같이 불편부당을 저널리즘의 기본 지향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2차 대전 후 서독지역에서 연합군은 기존의 모든 언론 매체를 폐간하고 신문도 혀가제로 변경했다. 연합군은 독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독일에 새로운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미군은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신문발행 허가를 한 개인에게 주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게만 주었다. 영국군의 점령 지역에서는 정당과 관련이 있는 인사가 신문발행 허가를 받았지만, 이것이 정당 신문의 부활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베메에 따르면, 연합군의 정책인 ‘사실과 의견의 분리’가 오늘까지 독일 언론의 기본 규범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Behme, 2004, p. 48).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찌의 경험으로,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정당과 연결된 신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2004년 사민당(SPD)이 운영하는 미디어 홀딩(DDVG)이 경영적 위기에 처한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의 주식을 인수해 대주주가 되었을 때, 상당한 사회적 우려가 표명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도이치란트’(Financial Times Deutschland)가 2002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특정 당을 지지하는 논평을 했을 때,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도 미국 및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통제가 약화되는 시점에 정파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근대적 형태의 신문인 한성순보(1883)와 그 뒤를 이은 한성주보(1886)의 발행 주체는 정부였다. 독립신문 등 민영 신문이 나타났지만, 이들은 계몽적 성격으로(김민환, 2007, 112쪽 이하) 객관성의 추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의 신문들은 일제의 통제와 겸열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해방 후 혼란의 시기에 강한 정파적 신문들이 등장한다. 이 당시 신문들은 크게 해방일보, 노력인민, 전선 등 공산주의 계열의 신문, 복간한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와 한성일보, 민중일보, 대동신문 등 보수 우익신문, 조선인민보, 자유신문, 중앙신문, 독립신보 등 민주주의를 표방한 진부주의 신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민환, 2007, 118쪽).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전국을 전후로 한 격동기에, 그리고 독일에서 나찌의 집권 이전까지 정쟁의 시기에 정파적 신문들이 언론을 지배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좌파 신문이 몰락하고 우파 신문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여당지와 야당지가 나누어진다. 4.19 이후에는 진보적인 민족일보가 창간되었으나 5.16 혁명으로 폐간되고 만다.

5.16 이후의 한국 신문들은 독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자유와 언론 자유는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다. 군부독재의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언론은 한편으로는 정부 권력에 순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이익을 추구하며 권력에 유착해 갔다(김민환, 2007, 125쪽). 이 시기 한국 언론의 ‘객관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 까지나 탈 정치화된 사건 보도의 영역에서였다. 남재일에 따르면 한국에서 군부독재 아래서 한편으로는 정권의 억압에 순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이 주는 특혜를 받아들인 언론사 사주들이 범죄 보도 중심의 탈정치적 상업주의 추구하고, 언론인들도 이에 순응했다(남재일, 2004). 남재일은 저널리즘의 객관성 개념이 이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정보의 객관적 전달을 중시하는 사실주의 규범을 내면화하면서 관행화된 ‘객관주의’로 축소되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시작한 객관주의는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언론자유가 확대되면서 객관주의의 영역이 정치와 정책 보도로 확대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¹⁴⁾

미국에서 언론이 정파성의 폐해(Schudson, 2003)와 인간 인식의 한계에 대한 성찰(Schudson, 1978)로 객관성 개념이 저널리즘에 도입되었고, 독일에서 언론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과 나찌의 경험을 통해 ‘사실과 의견의 분리’를 저널리즘의 중요한 원칙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성찰의 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건 보도 영역에서 객관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1988년에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다. 한겨레의 등장으로 한국 신문의 정파성이 비로소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두 비슷한 성향의 신문들만 있는 상황은 정파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대세’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박영상의 글(1986)이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1988년 이후 많은 신문들이 창간되어 신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문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신문 광고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1987년 신문 총광고비가 3천4백억 정도였던 것이 IMF 경제 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2조3천억 원을 기록했다.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전체 미디어 광고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신문 광고 총액은 IMF 이전에 세운 기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이 1조 5천억 원, 2010년이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 정파적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 선 1998년이라고 할 수 있다(남시욱, 2009, 90쪽 이하 참조). 1998년 한화그룹에서 분리되어 사원주주회사

14) 한국 신문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을 여기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원은 한국에서 신문이 친 민주주의의 문화의 중요한 소스의 하나였으며, “이러한 평가는 일제하 그리고 유신이나 군사독재 시대나 현재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류 신문은 물론 ‘한겨레’ 등을 평가할 때 진실이라는 점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상원, 2007, 72쪽).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로 소유구조가 바뀐 경향신문이 보수에서 그 반대로 정치적 지향을 전환했다. 이와 함께 정부소유의 서울신문(대한매일)이 정부와 노선을 같이 하면서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과 ‘한경대’(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가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각 신문들은 미디어란을 만들고 지면을 통해 상호비평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MBC와 KBS도 가담했다. 2001년에는 신문사 대상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언론개혁이 사회의 중요한 논제로 등장했다.

남시욱은 2001년을 ‘언론전쟁 발발의 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남시욱, 2009). ‘언론전쟁’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박형준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선거를 통해 인터넷 등 대안 언론의 새로운 힘을 확인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주류 언론의 과잉 권력을 제압할 기회로 삼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조·중·동의 입장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에 저항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았다(박형준, 2003, 151쪽 이하). 2005년 1월 1일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자, 현법소원이 제기되어 일부 규정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언론전쟁’과 언론의 정파성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7월 31일에는 신문법이 다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이 법에 대해서도 현재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해야 했다.

2) 정파성의 사회구조적 및 언론 산업적 원인

한국 언론의 극심한 정파성과 신문 혹은 신문과 방송 사이, 때로는 방송사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의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에 대한 분석은 기자 개인으로부터 기자 커뮤니티, 언론사 조직, 언론산업, 사회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강명구는 김대중 정권이 언론개혁을 선언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언론 간의 갈등을 ‘언론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한국사회 구조변동 안에서 해명한 바 있다(강명구, 2004). 그는 이를 위해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한국사회와 언론의 구조변동 층위’ ‘언론산업의 층위’ ‘언론사 조직과 기자 집단의 정체성의 층위’ ‘뉴스 담론의 층위’의 네 개로 구분했다. 나는 강명구의 구분이 한국 언론의 정파성의 원인을 분석하는데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와 언론의 구조변동 층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측면과 ‘언론산업의 층위’에 해당하는 한 가지 측면을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화 이후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 언론의 정파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원인의 하나가 우선 권력이동에 따른 혜택모니 투쟁 때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도전을 받은 ‘기성체제’(Establishment)의 핵심 영역과 그 핵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엘리트 집단의 해제모니 투쟁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된 것이 정파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성체제는 한상진이 제시한 개념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이념적, 그리고 초국가적 권력들의 중층 결합에 의해 이 체제를 이끄는 중추 세력 및 연합집단들에게 특권 또는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세력을 차단하며 이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포장 또는 정당화하는 선택과 배제의 지배 전략”을 뜻한다(한상진, 2009, 457쪽). 이러한 의미의 기성체제에게 국가권력은 국가에 부여된 물질적, 물리적, 법적, 제도적 권한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된다. 하지만 기성체제는 정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권이 무너졌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기성체제는 민주화와 함께 사회적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가 증가되면서 당연시 되었던 특혜와 혜택이 위협 받는 변화에 직면해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들어서는 상당 수의 정부 내외의 공직들이 기성체제 바깥에서 충원되었다. 기성체제와 국가권력 사이의 연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첩성이 일정 부분 축소된 것이다. 기성체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긋나는 사례들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보수로 분류되는 신문과 진보로 분류되는 신문에서 정파성이 강화되고, ‘전쟁’과 같은 형태의 적대적 태도와 행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그들이 기성체제와 그 주변부 엘리트 집단이 대리전을 했다기보다는 ‘전쟁’의 한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그 신문들의 소유주나 지도적 위치의 인물들이 기존체제의 일원이거나 그 주변부의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세계관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오는 현실 구성을 넘어 때로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 과장하거나 다른 편에 서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 대상이나 다른 언론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신들이 당사자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강명구도 민주화 이후의 언론구조의 변화를 지배블록과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고 있지만, 그는 보다 정교한 그리고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강명구 2004, 322쪽 이하). 가령 그는 군부독재 혹은 권위주의 하에서 언론이 도구적 정치의 장에 위치했으나, 민주화 이후 제도정치의 장으로 이동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고 보았다. ‘시민사회적 정치의 장’이 그것이다. 한겨레의 경우 ‘시민사회적 정치의 장’을 선택하지 않고 ‘제도정치의 장’으로 진입했고, 그래서 한겨레가 김대중 정권에서 여당지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강화된 중요한 원인으로 둘째는 한국 사회에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사회 갈등을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당이 갈등 조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회적 갈등은 ‘잠재’된 상태이거나 ‘억압’된 형태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가 표출(articulation)이 되면 다시 억압 혹은 타협을 통한 잠정적 ‘봉합’ 혹은 ‘안정적인 조정’으로 전개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억압되거나 잠재된 갈등이 다양한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의 사회 갈등은 지배권력에 의해 이념적 갈등(남북 혹

은 좌우 문제)으로 환원되어 억압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전략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념갈등 자체는 ‘과다 포장’되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자리잡고 있다(박길성, 2007, 122쪽 이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일거에 표출되지만, 이를 관리 혹은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해 관계자나 집단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실력행사나 폐쓰기식으로 (박길성, 2008, 23쪽 참조), 혹은 정해진 절차나 투명한 소구가 아닌 인맥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사회불평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될 뿐이다. 그 조정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와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 공동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조정되는 영역을 우리는 위르겐 하버마스를 따라 생활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Habermas, 1988b, p. 529 이하). 정치, 법, 경제 등과 같이 목적성 합리성이 지배하는 ‘시스템’과 달리, 사적 영역인 생활세계는 원래 가치적 합리성이 추구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이해적 소통(하버마스)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분단과 전쟁, 국가 독점적 고속성장 등을 통해 한국에서 사회 공동의 가치를 조정하는 생활세계의 기능이 손상되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과 같은 가치 공동체적 성격의 공간이 한국에서 이익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체가 되었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은 합의된 가치와 원칙이 아니라, 연고주의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당성의 위기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고주의로부터 언론사와 그 구성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취재 행위도 연고주의를 통해 (더 잘) 이루어진다.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출입기자나 심지어 편집국장이 정권과 같은 지역 출신으로 교체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당의 비민주성을 사회 갈등 조정의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하고 있다(장동진, 2010; 정근화, 2007; 박길성, 2008). 정건화는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제도와 경험의 축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정당의 전근대성을 들었다(정근화, 2007, 31쪽). 그는 정당이 사회의 제 세력들이 표출하는 다양한 이익과 요구들을 집약하여 그것들을 정책 대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거쳐 상당 정도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했지만, 정당 시스템은 전근대적이며 사회경제적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건화, 2007, 32쪽). 박길성은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와 같은 정당정치를 통한 갈등의 제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정당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사회다. 한국사회는 정당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고 말했다(박길성, 2008, 24쪽).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생활세계와 시스템(정치, 법)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정당은 전략적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치 공동체이다. 민주적 정당은 이른바 ‘풀뿌

리’ 영역에서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논의하며, 이를 실현시킬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을 추진할 공직자 후보를 위로 올려 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의 가치 합리적 영역과 목적 합리적 영역이 연결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정당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공백을 한국의 언론사들이 메우고 있거나 메우기를 자임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 과정을 관찰하고 보도하며, 갈등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갈등 주체들의 대변인이나 변호인, 혹은 갈등 조정 행위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¹⁵⁾ 강명구는 이런 상황을 “축구중계를 해야 할 언론이 선수들의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중계까지 하는 혼국”이라고 비유했다(강명구, 2005). 매우 적절한 비유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실제로는 게임을 하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치 중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이나 대변인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은 다르다. 변호인이나 대변인은 자신이 변호하거나 대변하는 대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설득을 위해서는 특정 사실을 강조하고, 특정 사실을 감추거나, 사건의 성격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독자와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은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언론은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Patterson, 1994). 즉, 언론이 정당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언론이 정파적인 이유로 셋째는 한국의 신문 산업 혹은 신문 경영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상품으로서의 신문은 이중적 시장을 가지고 있다. 독자들에게 소구되는 좋은 품질의 기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시장과 이렇게 해서 생산한 독자의 주목을 광고주들에 파는 광고시장이 그것이다. 신문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는 그렇게 때문에 독자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지면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경우, 보다 많은 독자들이 그 신문을 구매하기 때문에 높은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품 구매력이 높은 많은 수의 독자를 확보하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신문의 상업주의가 확장되면서 정당 정파적 신문이 사라지고 불편부당 혹은 객관성을 주창하는 신문이 늘어난 것은 그런 신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할린(D.C. Hallin)과 만치니(P. Mancini)도 유럽에서 정파적 신문보다는 중간자적 태도로 보도하는 신문이 더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고, 시장에서 더 성공하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Hallin & Mancini, 2004/2009).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되지 않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신문은 높은 품질의 지면을 생산해서 독자수를 늘리기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자산으로 광고

15) 우리 맥락과 조금 다르지만 미국 선거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한 토마스 패터슨(Thomas Patterson)은 미국 선거에서 미디어가 정당의 역할을 대신 하면서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다(Patterson, 1994). ‘뉴스 가치’를 추구하며, 주목을 생산하기 위해 활동하며, ‘새로운 것’ ‘독특한 것’ 혹은 더 나아가 ‘충격적인 것’을 선호하는 언론이 선거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책 요소보다는 게임 요소가 강한 주제(‘게임 스키마’)가 더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다.

영업과 부수 사업을 해 왔다. 신문판매 수입이 전체 신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 혹은 그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신문 배포 부수의 확장도 구독료 수입을 높이기보다는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가 우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무가지와 높은 경품을 주었고, 적지 않은 독자들에게 신문은 공짜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독자를 확보하기보다는 상대 신문 독자 빼앗아오기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었다.

신문 수가 시장이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도 이러한 과당 경쟁의 한 구조적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시장 규모에서 신문 수는 줄지 않은 극도의 경쟁 상황에서, 장기적인 기획으로 신뢰를 높이고 서서히 독자층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적 존재감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 수단으로 한국 신문이 택한 전략이 강한 정파성이라고 볼 수 있다. ‘회색 지대’가 아니라 한 쪽 편을 들며, 다른 쪽을 강하게 질책하는 신문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높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맺는 말: 사회적 소통과 언론의 정파성, 그리고 대안들

1) 사회적 소통과 언론의 정파성

‘소통’이란 무엇일까?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2011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 칼럼 ‘2012년의 선택, 키워드는 소통’에서 “2012년에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 여야 모두에 필요한 것은 지역, 세대, 남북, 계급이라는 국민의 ‘부분적 의사(partial will)’에 호소, 영합하기 보다는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 부단히 밑바닥의 민심을 읽고, 억울한 민성(民聲)을 듣고, 저잣거리에 나가 민생의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민초들을 어루만져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 맺는 말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느끼고 말로 위로해주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지 않고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 소통의 부족을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말에 ‘말을 듣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인지하는 행위이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를 막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인지를 넘어 그 사람이 의도하는 데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인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후자의 의미로 소통할 수 있을까? 만나서 대화를 통해 가치가 다르다는 것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헤어지는 것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가진 가치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일하며, 우리의 이

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충분히 다양한 측면의 손익을 계산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제적인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그 사람이 해 주길 원하는 행위에 대한 기대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설득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은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차안해서 제시한 소통 모델이 하버마스의 ‘실천적 담론’ 이론이다.

하버마스는 객관적인 세계에 관한 진실의 문제를 상호주관적(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듯이, 가치나 이해관계가 걸린 실천적 문제도 생활세계에서 형성되어 인정받은 규범을 바탕으로 논증을 통해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보았다(Habermas, 1988a). 이러한 논증을 하버마스는 ‘실천적 담론’이라고 불렀다. 실천적 담론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참가자나 주제, 발언에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 단 제기된 문제의 타당성 검토와 상관없는 것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 더 나은 논점이 가지는 강압 외에는 어떤 다른 강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동기 외에 다른 어떤 동기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실천적 담론은 참가자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전제가 있다.

- 논리적이며 의미론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참가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한다.
- 모든 참가자가 진실성의 의무를 가진다.

논의가 되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가치와 원칙 그리고 사실관계들이 고려되고, 힘의 논리가 아닌 논리의 힘이 적용되며, 기만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고 진정한 발언만 행해지는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이 합의는 ‘기만적이지 않고’ ‘일반화할 수 있는 이익’을 표출한다. 일반화할 수 있는 이익이란, 장기적 안목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한 쪽이 부당하게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할 때, 즉, 내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으려고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서 단기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서 설득하려고 할 경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상정한다.

만약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가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그렇지 않고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상황도 생겨날 것이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 가치들은 대부분의 경우 ‘방법론’의 차이이며,

‘방법론’의 차이는 많은 경우 그 사안과 관련되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¹⁶⁾ 물론 모든 사안에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 가치와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서로 도저히 합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실은 스스로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천적 담론의 조건이 실제적 대화 상황에서 완전하게 충족될 수는 없다. 하버마스도 담론을 ‘이상적 대화상황’으로 보고, 담론의 조건들을 반사실적(kontrafaktisch)이라고 규정했다(Habermas, 1991, p. 133). 그러나 이 말은 대화 상황이 비현실적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대화의 조건을 가능한 실천적 담론에 근접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한국 사회의 소통 구조가 이러한 상황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소통을 담당하는 언론이 진실성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갈등 사안에서 그 사안과 관련되는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정파적 지향 때문에 반쪽의 진실만을 전달하고, 대화의 상대방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적이나 악으로 규정하고, 정파적 동기를 갖고 독자와 시청자를 설득하려 한다면, 사회공동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에서 ‘기만적이지 않으며’ ‘일반화할 수 있는 이익’을 도출하기 힘들다.

2) 완화 방안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통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언론이 현재와 같은 정도와 방식의 정파성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언론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며, 크게는 사회 전체의 지배구조, 갈등구조 및 갈등 조정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과 같은 정파성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지금이 일종의 전환기 혹은 과도기이며,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 혹은 과도기라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세월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질이 높아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언론 상황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거나, 한국 사회를 분극화된 다원주의 사회(Hallin & Mancini, 2004/2009)로 몰고 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현재와 같은 모습의 정파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16) 가령 경제 성장을 한 다음 많은 것을 분배하자는 우파의 성장론자와 분배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좌파 분배론자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는 개인의 행복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지만 반대로 기본적인 물질적 바탕이 개인의 행복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주변 정세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일정한 성장이 없이는 이러한 물질적 바탕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성장이 달성될 때까지는 분배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공동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시작은 아이러니 하게도 일종의 종속변수에 속하며, 가장 아래 층위에 있는 기자직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직과 기자 ‘공동체’의 성격은 언론사 조직의 층위나 언론 산업 층위, 사회 층위에 의해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층위의 문화나 특성은 기자 충원과 인사제도, 소유주나 경영자의 성격과 태도, 사회 전체의 직업 구조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은 실제 취재를 담당하고 기사를 생산하는 그래서 실체가 뚜렷이 보이는 기자직의 전문직화 노력에 사회적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정파성을 극복한 것이 전문직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였다. 미국의 언론이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가 정파적이며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도 (그 반대 방향으로) 정파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그러나 셋은 예외적 사례가 있지만 의도적, 이념적으로 추동된 혹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편향(bias)이 미국 뉴스 기관을 보통은 지배하지 않으며(Schudson, 2003, p. 35), 미국에서는 저널리스트들이 스스로를 정파적(partisan)으로 보기보다는 전문직(professionals)로 보며, 보통은 그렇게 행동한다(Schudson, 2003, p. 43)고 주장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 정당이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기자직의 전문직화는 개별 기자나 개별 언론사 기자들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대학에서부터 저널리즘의 역사와 윤리, 저널리즘 철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재경은 한국에 저널리즘이 도입된 지 120년이 넘었고, 저널리즘 교육이 국내 대학에 도입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저널리즘 교육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이재경, 2008, 68쪽). 아마도 세명대학교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저널리즘 스쿨이 국내 유일의 저널리즘 전문 교육 기관일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기자 재교육 기관에서도 전문직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자들의 모임인 협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누구보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와 같이 기자/PD로 구성된 협회가 언론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협회들이 정치적 경향성을 떠나 함께 특정 사업을 벌인다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관훈클럽이 개최한 토론회 ‘벽을 허물자’도 좋은 사례다. 단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한국 언론에서 진실 추구, 객관성, 균형성, 불편부당성, 정파성 등 이 글에서 제시한 개념들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성찰과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론적 및 실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편집권/편성권의 독립과 같은 내적 자유에 대한 논의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기획해 볼 수 있다.

언론 기관 층위에서 정파성 극복을 위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신문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도 논란만 일으킬 뿐 실효성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보다 공영방송 구조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영국의 BBC나 독일의 ARD 혹은 ZDF 수준이 된다면 언론으로 인한 사회적 소통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장 선임 방식이다. 현재와 같이 청와대 혹은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는 체제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공영방송의 정파성과 그에 따른 신뢰성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 이와 함께 방송사의 내적 자유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야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2012년과 같이 선거를 앞둔 해를 롤스(John Rawls)가 말한 무지의 장막으로 생각하고,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언론 산업의 층위에서는 더 큰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신문과 광고주와의 관계이다. 신문광고 문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신문이 광고와 협찬 때문에 거대 기업에 포섭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신문이 중간 혹은 작은 규모의 기업과 기관에 광고와 협찬을 강요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정당 정파성은 그래도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기업과의 관계는 잘 드러나지도 않는 문제다. 이 영역은 시민사회, 학계 등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신문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문 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묘사된 갖가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신문은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풍부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정파성의 와중에서도 신문이 권력 감시와 견제와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본다. 신문 시장의 정상화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에서 혹은 신문 시장 정상화를 추동하는 방향으로 신문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며 의미 있다고 본다.

사회 전체의 갈등구조와 권력구조가 언론에도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언론의 정파성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의 민주화와 같이 사회 갈등의 조정에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주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421.
- 강명구 (2005). 언론의 당파성, 『신문과 방송』, 2005년 1월
-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1호, 156–195.
- 김경희·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61–387.
- 김민환 (2007). 한국 언론과 객관주의 보도원칙, 임상원 등,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107–137), 나남.
- 김성해/ 김춘식/ 김화년 (2010). 위기 경고하기 혹은 위기 초대하기: 언론이 재구성한 2008년 9월 위기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10년 여름, 통권 50호, 164–185.
- 김수정/ 정연구 (2011). 무(無)보도 현상과 언론윤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국정원, 기무사 민간사찰 관련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11년 봄, 통권 53호, 5–28.
- 김영욱 (2002). 『저널리즘의 객관성』, 한국언론재단
- 김영욱 (2006). “윤리 규범의 상충과 조정 – 가치윤리적 접근”, 『한국언론학회 2006 봄철정기학회 발제문』.
- 김영욱 (2007). 언론의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 – 개념의 차원과 적용 범위, 『한국언론학회 2007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영욱 (2009).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미디어인사이트』 2009년 3호, 1–30.
- 김영욱/ 임유진 (2009). 언론의 정부-언론 관계와 언론 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도 이데올로기 차원 비교 평가,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94–115.
- 김인영 (2010). 『2008년 촛불집회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과 정치적 함의: 신문매체의 이념양극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재홍 (2003).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언론논조와 국민여론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2호, 197–218.
- 남시욱 (2009). 언론의 위기와 직업언론인의 책무, 『관훈저널』, 통권113호, 89–109.
-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의 아비투스 –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재일 (2008). 미디어비평,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과 방송』, 2008년 9월.
- 박길성 (2007).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통합, 『2007년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2007』, 9, 113~132.

- 박길성 (2008).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제9집 1호 2008.6, pp. 5~29.
- 박영상 (1986). 특집 86년 한국언론 – 신문 / 보도의 획일성 문제의식 결여는 여전, 『신문과 방송』, 1986년 12월호.
- 박재영 · 노성종 (2009). 한국 언론사들의 정파성 지형, 김사승 · 강영욱 · 박재영 · 이종혁, 『한국 언론의 정파성』 (17–65), 한국언론재단.
- 박형준 (2003). 단절의 시대와 통합의 정치 [쟁점/우리 사회 소통의 위기, 대안은 있는가], 『당대비평』, 통권 제23호 2003. 9, 140~157.
- 송용희 (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2004년 국가 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해설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7년 51권 1호, 229–251.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5권 2호 2001.3, 284~315.
- 윤영철 (2000).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봄 27호, 48–81.
- 이원섭 (2006).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설 비교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2006년 가을 통권 35호, 329–361.
- 이재경 (2004). 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신문과 방송』, 2004년 4월
-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2호, 48–70.
- 이준웅 · 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제49권 5호
- 임상원 (2007). 자유언론과 민주주의, 임상원 등,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19–99), 나남.
- 장동진 (2010). 한국사회의 갈등과 사회적 화합, 『철학과 현실』, 2010년 여름호(통권 제85호) 2010.5, 49~60.
- 정건화 (2007).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통권 71호 2007.10, 11~50.
-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6개 종합일간지의 3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성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99–426.
- 한상진 (2009). 소통사회학의 도전과 과제: 민본21,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2009.6, pp. 455~476.

Behmer, Markus (2004). Gesinnung – Parteilichkeit – Ueberparteilichkeit. Zur Geschichte des Rollenwandels der Presse seit dem 17. Jahrhundert. In Duve,

- Freimut, & Haller, Michael (Eds.), *Leitbild Unabhängigkeit. Zur Sicherung publizistischer Verantwortung* (pp. 31–51), UVK.
- Dworkin, Ronald (1977).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ert, Bernard (1995). Moral Impartiality,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XX*: (102–127).
- Habermas, Jürgen (1988a).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1: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 Habermas, Jürgen (1988b).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 Band: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Suhrkamp.
- Habermas, Jürgen (1991).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Suhrkamp.
- Haller, Michael (2004). Die Idee des neutralen Beobachters. Über das Paradigma des modernen Informationsjournalismus und die damit verbundenen Probleme. In Duve, Freimut, & Haller, Michael (Eds.), *Leitbild Unabhängigkeit. Zur Sicherung publizistischer Verantwortung* (pp. 13–30), UVK,
- Hallin, Daniel C. & Mancini, Paolo (2004). *Comparing Media System: Three Models of Medial and Politics*. 김수정 · 정준희 · 송현주 · 백미숙 역(2009). 미디어시스템의 형성과 진화. 정치-미디어 3모델, 한국언론재단.
- Hartmann, Nicolai (1962) *Ethik*, 4. Ed., Walter de Gruyter (초판 1925).
- Jollimore, Troy (2011). Impartialit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1 Edition), Edward N. Zalta (Eds.), forthcoming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1/entries/impartiality/>>.
- Luhmann, Niklas (1996).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 Opladen.
- Mieth, Dietmar (1997). The Basic Norm of Truthfulness, In Clifford, Christian, & Traber, Michael (Eds.), *Communication Ethics and Universal Values* (67–104), Thousand Oaks.
- Patterson, Thomas E. (1994). *Out of Order*, Vintage.
- Schudson, Michael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 Basic Books.
- Schudson, Michael (2003). *The Sociology of News*, W.W.Norton & Company.
- Shoemaker, Pamela J., & Reese, Stephen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Longman. 김원용 역(1997) 매스 미디어 사회학, 나남.
- Williams, Bernard (2002). *Truth and Truthfulness: An Essay in Genea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Ethical Journalism. A Handbook of Values and Practices for the News and Editorial
Departments*, September 2004 (http://www.nytco.com/pdf/NYT_Ethical_Journalism_0904.pdf)